< 별첨 >

거대재해에 대한 민영보험의 활성화방안

1. 인위재난 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

- 시설의 대형화, 고층화, 밀집화로 대형사고의 가능성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

《 도입 필요성 》

- 화재, 붕괴, 폭발, 환경오염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 발생 (2004년도 발생건수: 33,687건, 인명피해: 2,637명)
- 인위적 재난은 제3자에게 인적, 물적 손해를 야기하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, 재난 원인자의 부담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손해배상의 문제 발생
- 또한 현재 화보법에 의한 의무보험은 적용대상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존재
- 보험가입수준이 낮아 완벽한 피해복구 및 피해자보상이 어렵고, 법적 배상주체를 제쳐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고의 보상과정에 개입, 예산으로 보상하여 부주의와 태만을 조장할 우려

《 도입방향 》

- 현행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(이하“화보법”이라 한다)을 대폭 확대, 다수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및 공공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재난보험제도 도입
- 보험서비스의 주기능인 안전진단 및 위험관리를 수행하여 사전적 재난관리체계 확립

- 공공성과 시장원리를 겸비한 의무재난보험을 도입하여 사회의 안전망 강화

《 도입방안 》

- 재난위험의 관할부처를 정하고 관련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 재난보험제도 도입 ⇨ 대상위험 및 대상시설의 확대를 포함한 화보험 확대 개정필요
- 포괄주의방식으로 보험대상위험을 확대
- 재난보험의 의무가입은 배상책임만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통한 제도의 확산을 유도
- 적용대상 시설을 기존 화보험상의 특수건물에서 특수시설로 확대
⇒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
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종, 2종 시설물
-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
⇒ 국가시설 가입의무화 및 재보험제공
⇒ 1사고당 보상한도 설정
- 안전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의 보험료 반영을 위한 안전진단기관의 법적근거 마련
⇒ 화보험회와 보험회사의 인프라를 고려한 역할분담 필요
- 관계기관의 가입대상물건 취합관리 및 미가입물건에 대한 통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리기관 선정

《 향후과제 》

- 정부는 조속한 관련 법제도의 마련, 가입대상 시설물 관리체계 강화, 재난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검토
- 보험산업은 보험제도의 공익성 제고, 재난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노력 필요

2. 자연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

-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재정에 의한 복구지원방식에서 보험제도로 전환 및 국가와 민영보험시장의 기능적인 협력관계에 의한 발전전략 필요

《 필요성 》

- 자연재해손실에 따른 경제적 비용증가
 - ⇒ 최근 10년간('95~'04) 평균적으로 자연재해피해액은 약 1조8천억원이고 이에 대한 복구액은 2조7천억원이며, 여기서 무상지원을(정부, 지자체)은 81.8%(사유시설 40%)임
 - ⇒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중 보험보상비율이 낮아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
- 자연재해는 거대한 누적위험의 특성이 있고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며 민영시장의 담보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보험공급에 문제발생
- 자연재해 위험관리방법은 사전적인 위험경감(위험노출감소)과 사후적인 Risk-Financing(경제적 위험노출 감소)이 있으며, 보험은 사후적인 Risk-Financing을 하는 제도임
- 보험제도는 사회전반의 위험을 축소시켜 사회적 비용의 절감 가능
 - ⇒ 위험의 집단화, 위험의 분리, 도덕적 해이의 통제를 통한 위험경감기능의 작동
- 주요 선진외국에서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참여, 협력하는 보험제도의 운영이 일반적임
 - ⇒ 정부의 역할은 원보험자, 재보험자, 언더라이터로 구분
-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(2001년), 풍수해보험(2006년)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2008년에는 양식재해보험이 도입될 예정

《 개선방안 》

- 자연재해보험제도는 정부와 민간시장이 상호 기능적 강점을 결합하는 파트너십(Partnership)을 구축하여 발전할 필요
 - ⇒ 민간시장의 담보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, 국가는 민영부문의 사업성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을 조성
- 국가와 보험산업의 역할분담
 - ⇒ 국가는 법률 및 제도 보완, 재보험자 역할, 보험사업자의 사업성보전, 사전적인 위험경감,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등
 - ⇒ 민영시장은 적극적인 시장참여(위험인수/위험분산), 손해사정의 공정성·효율성 제고, 위험분산기법의 다양화 등
- 자연재해관련 정책성보험의 중장기적 발전방향(로드맵) 설정
 - ⇒ 부문별(농업, 어업, 일반)로 특화된 발전전략, 보험대상의 영역조정, 농어업정책과의 연계성 확보,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신설 등
 - ⇒ 소방방재청의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통계집적, 위험평가모델 개발 등 지원역할 필요
- 국내 정책성 보험의 운영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의 축소, 손해사정제도의 개선, 통계자료 집적/관리 등 기초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
- 도덕적 위험 및 역선택 축소
 - ⇒ 도덕적 위험의 통계적 분석시스템개발, 경감수단의 효과 검증, 도덕적 위험 발생시 보험조건/인수 제한
 - ⇒ 역선택 축소를 위해서는 낮은 위험(Good Risk)을 보험제도에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, 의무가입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
- 손해사정의 공정성, 전문성, 인력확보를 위한 개선
- 보험제도화에 필요한 통계집적 및 관리
 - ⇒ 재해통계 및 보험통계의 체계적인 통합집적·관리 방안 마련(소방방재청, 전문기관)